스페인 축구 팬들이 12일(한국시간)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자축하며 마드리드의 한 분수대에 올라가 열렬히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현안 예산 한푼도 안 깎겠다"

한나라 당권주자들 호남공약 살펴보니

한나라당 당권주자 호남공약	김성식	김대식	홍준표	이혜훈	이성헌	정두언	한선교	나경원	안상수
19대 총선 비례대표 호남배려	석패율제 도입, 광주·전남·전북 각 1명 이상	광주·전남·전북 3명씩 9명 배려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제도 도입	50% 이상 배려	최소 40% 배려 규정 필요	당선권 내 7명 이상 확대해야	전략지역 범위 확대. 호남 비중 추가	최소 3석, 비례대표 중 30% 이상	호남 인사 2석 배려
호남 발전 공약	여수엑스포와 서남해안 개발 지원	여수엑스포와 F1대회 및 대기업 유치 지원	여수엑스포·우주산업 클러스터·광주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 지원	여수엑스포·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지원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과 새만금 개발 안정적 추진	F1대회, J프로젝트, 공동혁신도시, 새만금사업 지원	남해안 선 벨트,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지원.	여수엑스포와 F1대회, 제주-호남 해저고속철, 새만금사업 지원	광주시·전남도에서 요청한 국고지원 사업 적극 지원
지역감정 해소 및 균형발전	균형발전으로 국민 통합 실현.	한나라당 호남 출신 대표나 최고위원 당선되면 해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주요 해결책	경제적 화합이 가장 중요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이양	다극화된 지역 허브 창출	영호남 민간 교류 활성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및 선거제도 개편	과감한 인사 탕평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시

※후보는 기호 순. 김성식(기호 1) 김대식(〃 2) 홍준표(〃 3) 이혜훈(〃 4) 이성헌(〃 5) 정두언(〃 6) 한선교(〃 9) 나경원(〃 10) 안상수(〃 12). 서병수·정미경 후보는 응답하지 않음. 남경필 후보는 단일화로 사퇴.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호남 관련 공약은 각양각색이었다.

12일 광주일보 설문조사 결과, 비례대표 배려나 지역발전 공약, 지역감정 타파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고민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깊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세심한 공약 비교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비례대표 호남 배려**=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는 이혜훈 후보의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절반 이상 배려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충청지역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출신지 위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광 출신의 이성헌 후보도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적정 비율의 의석을 얻을 때까지는 당선권 내에 비례대표를 최소 40%로 배려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영광 출신의 김대식 후보는 "광주·전남·북에 각 3명씩 9명을 배려해야 한다", 광주 출신의 정두언 후보는 "18대 총선 시 30번 당선권에 7명을 배려했으나 무늬만 호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400만 호남 유권자를 대변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19대 총선에서는 정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선두 주자로 알려진 안상수 후보는 겨우 2석을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해결을 주장, 호남권 배려를 기대하는 대의원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호남 발전 공약**=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은 없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간담회에서 요청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한선교 후보가 남해안 선벨트,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지원을 약속한 뒤 "호남 예산을 한 푼도 깍지 않겠다"고 공약해 답변의 성실성이 돋보였다.

김대식 후보는 여수엑스포와 F1대회, 순천정원박람회 지원뿐 아니라 대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여수 엑스포 개최와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 광주 비엔날레 일원 문화지구 조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안상수 후보는 광주시·전남도에서 요청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감정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의 해법이 제시됐다.

김대식 후보는 "한나라당 전대에서 호남 출신 인사 대표나 최고위원 당선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안상수 후보는 "과감한 인사 탕평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혜훈 후보는 경제적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선교 후보는 영호남 민간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두언 후보는 "세계적 위상을 가진 다극화된 지역 허브 창출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구시대의 유물인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세워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수십건 더 있다"…확산되는 영포게이트

박지원 "대통령이 환부 도려내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영포회 및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의 월권 의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문제가 된 인사들을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전에 오늘이라도 당장 문책하고 해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영호 비서관 하나로 정리해선 안 된다. 얼마나 농단이 심했냐"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3실장제로 가려고 한 게 청와대 내부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드디어 한나라당 의원 입에서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언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보고 이간질한다고 하는데 이간질로 흔들린다면 집권여당 자격이 없다"며 "총체적 국정문란이 이간질로 밝혀진다면 이간질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김종익씨 이외에 민간인 수십 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낸 이메일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두언 "대통령이 조사 지시 처벌 수순"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의혹 파문이 여권 내 권력투쟁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2일 "청와대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했고, 정리·처벌 수순에 들어간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 내 비선조직의 존재와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라며 "권력투쟁으로 몰아서 사태를 덮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정리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투쟁으로 모는 세력, 야당의 분열책에 당이 놀아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권력투쟁 논란을 경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권력투쟁으로 몰아가는 일이 있으니 정 의원이 이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고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성헌 의원이 야당 정보제공자로 김유환 총리실 정무실장을 지목한데 대해, "이 의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고 상식에서 벗어나 너무 오버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성헌 "본질은 권력 내부 추악한 암투"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2일 여권 내 권력투쟁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 내부의 추악한 암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권력 사유화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게 되면 권력의 밑동뿌리가 썩는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무총리실 김유환 정무실장이 '영포목우회'(영포회) 관련 내용을 야당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이 전달된 대상자로 민주당 신 건 의원을 거명했었다.

그는 이날도 자신이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환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더 이상 의혹만 키우는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촉구한다"며 "거짓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